

“정치적 이념보단 집값 안정화 등 민생 회복에 최우선을”

서울시장에 바란다

나이불문 ‘부동산 안정’ 목소리
광화문 광장·미세먼지도 쟁점
청년층은 일자리 정책 지원 주문

“요새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을 짝는다. 당보고, 사람보고 뽑는 시절은 갔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7일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보수나 진보나, 좌파나 우파나를 보고 표를 던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후보를 다음 시장으로 점지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전 10시10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제3투표소에서 만난 시민 이경영(이하 가명·55) 씨는 “옛날에 금호그룹 다녔을 때 후보가 우리 회사에 왔다. 그간 그 후보를 쫓아다녔는데 할 말은 하고 소신있는 행동을 보여줘 오랜 기간 팬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씨는 “그런데 그 후보는 안 찍었다. 왜냐면 공약이 별로였다”면서 “현재 갖고 있는 집이 없어서 아파트를 싸게 준다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털어놨다.

신길5동에 사는 조일권(73) 씨는 “일년째리 시장이 주택 30만호 짓는 거? 말도 안 된다. 우리 동네도 재건축 여부를 놓고 말이 많다. 집 헐기 시작한 지 4년 이 넘었는데 반도 못했다”면서 “다음 정권 바뀌면 또 마찬가지다. 공약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토론회 나와서 싸우는 거 보면 둘 다 똑같다”며 혀를 끝끝 찼다.

투표장에 온 시민들이 다음 시장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집값 안정’이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대로, 있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결정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모습. /뉴스시

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대로 잔뜩 성난 상태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서울영신고등학교에서 한표를 행사한 박숙경(65) 씨는 “집 없는 사람들 좀 제발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집 있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낸다고 뭐라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같은 무주택자들은 전셋값이 올라서 진짜 악에 받친다”면서 “집이 없으니까 최고로 화가 나고 살맛도 안 난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신길동 주민 박선주(58) 씨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깎아준다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았다. 은퇴자들 집 하나 갖고 있는데 돈을 어디서 구해서 내냐”면서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 주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세금이나 올리지 마라. 재산세 때문에 의료보험료도 올랐다. 세금 폭탄 맞아서 부글부글 끓는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로부터 불똥이 튀었다. 포구 영신고등학교와 달림마포구 성산초등학교는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신길6동 제3투표소는 투표소 밖으로 줄이 길게 늘어섰지만 합정동 제2투표소는 약 2분 간격으로 시민들이 한 두명씩 드문드문 나타나 차기 시장에게 표를 던지고 갔다.

이날 왼쪽 발에 깡스를 하고 합정동 제2투표소에 온 이라영(66) 씨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경제를 일으키고 서울을 좀 융화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사람에게 표를 주겠다”면서 “깡스한지는 한달 좀 넘었지만 한 표 한표가 소중한 투표하러 나왔다”며 뿌듯해했다.

마포구 성산초등학교를 방문한 주부 이정수(64) 씨는 “전세 사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후

보를 뽑으러 왔다”며 머쓱하게 웃었다.

지팡이를 짚고 합정동 제2투표소를 찾은 김선순(85) 씨는 “시정을 잘 펼쳐 나갈 믿음직한 사람에게 투표했다. 말로만 공수포 내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 찍으면 세금만 더 든다. 모두에게 돈 10만원 주는 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반문했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제2투표소(서울농학교 대강당)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다 저마다의 이유를 갖고 투표소를 찾았다.

윤관기(45) 씨는 “다음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대책을 꼭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윤 씨는 “집값 폭등이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으로 돈 벌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책을 강력하게 하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만 생긴다”며 “위에서 잘하면 국민들은 따라줄 것이니 집값 안정화를 꼭 이뤄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가영(20) 씨는 “집값이 너무 급등했다. 집값 못 잡은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앞으로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도시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오래된 주택이 있고 오래된 주택은 아니어도 저이용되는 주택이 꽤 많은 점이다. 그중에서도 역세권처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저이용·저층 주택이 있다면 그런 곳은 고밀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를 확장하거나 서울에만 사람이 몰리게 하는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전체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임 교수는 “수

요-공급 법칙을 생각해보면, 집값이 올라야만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내 집을 헐고 다시 지어 되팔 때 남는 차익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과거 뉴타운 지정 때도 상당히 많은 곳을 지정했는데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서 다시 뉴타운 지정 해제를 했다. 지금도 재건축을 기다리는 지역이 있는데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개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표장에서 만난 20·30대는 정권심판론으로 무게가 쏠린 모습이었다.

투표 후 서울농학교를 빠져나가던 최한석(23) 씨는 “어떤 기준을 갖고 다음 시장을 선택했냐”는 물음에 “후보들의 정책은 믿지 않는다.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이다. 지금쯤 제동을 걸어 줘야 한다”고 답했다.

전아영(20) 씨는 현재 진행 중인 광화문 광장 공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전 씨는 “광화문 광장 전면 백지화를 내건 후보에 투표했다. 도로도 막히고 소음도 많이 나고 전체적으로 주민 불편이 너무 심해 다니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유연(21) 씨는 “주택과 일자리 정책이 쓸만하고 청렴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20·30세대의 민심 이반에 대해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이종찬 교수는 “첫째, 청년 세대는 조국사태,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정에 실망했다. 둘째는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로 취업난 등 청년들의 좌절이 민심 이반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현정·박태훈 기자 hjk1@metroseoul.co.kr

야권 승리, 이젠 대선 밑그림... ‘보수 야권 통합’ 본격화

차기 대선 위한 정계개편 돌입
야권 통합돼야 보수 결집 유리
국민의힘·국민의당 전당대회
함께 치뤄야 야권 통합에 속도

‘대선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 이후 보수 야권의 정치 지형이 변화할 전망이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대선 준비를 위한 보수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재보선 이후 차기 대선을 위한 정계 개편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가 전망한 정계 개편은 국민의힘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보수 야권 대선 주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친 후 제1야당 타이틀로 출마해야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결국 야권이 하나가 될 때만 정권 교체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갖고 있다. 당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통합 대상으로 거론된 안철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

대표가 지난 5일 “4월 7일 이후 야권은 혁신적 대통합과 정권 교체라는 더 험하고 싶은 산과 강을 건너야 한다. 야권 대통합의 약속, 정권 교체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구상이 나온 셈이다.

당시 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야권 대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운동장이 기울어도 너무나 기울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2017년 대선부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연달아 패배해 여당 위주로 중앙·지역 지자체 및 의회

권력이 쏠린 점을 언급한 것이다.

재보선 이후 보수 야권 지형 변화의 시작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8일 종료되면,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나선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8일 의원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핵심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국민의당과 함께 치를지 여부다. 앞서 안 대표가 서울시장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합당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후보자가 당무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당헌·당규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당 통합 형태로 진행된다면 보수 야권 통합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권 양대 정당이 하나로 합치는 만큼 바깥에 있는 홍준표 의원이나 윤석열 전 총장 등을 영입하는 데 명분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대선 후보 선출까지 이어지면 보수 야권이 통합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밝힌 ‘제3시대’ 통합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신울명지대 교수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이든 신승이든 (보수 통합) 중심이 된다. (국민의힘이 가진) 당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보수 야권 통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는 해석도 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이날 본지와 통

화에서 “(먼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에 (통합)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장은 전체 야권 통합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뛰어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해도 당분간)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전체 야권 대통합은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도 전망했다.

한편 재보선 이후 보수 야권 지형 재편과 별개로 여론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에서 여권이 패배하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사실상 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과 여당 간 정책 공조에 엮박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른바 레임덕(정권 말 권력 누수) 현상이다.

이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친문 세력 이탈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 또는 신승을 하면 현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는 만큼 당분간 레임덕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일부 의원들이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시간은 상당 기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